



홍범도 논쟁
2~3면

홍콩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중국 경제 위기
4면

9.4 공교육 멈춤
행동
7~10면

중국 내
반일 감정 확산과
한족 민족주의
11면

정신질환과
범죄
12~13면



공교육

멈춤 행동

정당하다

관련 기사 7~10면



홍범도 홍상 철거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김문성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홍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 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쏠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색의 일환이다.

이미 7월 초에 국가보훈부 초대 장관 박민식이 친북 독립운동을 재심사하겠다고 한 바 있다. 북한 국가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대해 친북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결국 좌파적 민족 독립운동을 도려내겠다는 것이었다.

사실 한국 군부와 육군사관학교는 모두 그 뿌리에 있는 '미군정'과 '친일파'라는 키워드를 지울 수 없다. 건국 이후 3공화국(1962~1972) 때까지 국방부 장관 10명 중 8명이 일본군 장교 출신이거나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 출신이었다. 법무부장관은 12명 중 9명이 일제 판검사 출신이었다. 제헌의회 의원 중 잠깐이라도 독립운동에 발을 담궜던 이는 전체 209명 중 68명에 불과하다.

홍범도 깎아내리기가 자기 고백처럼 들리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적으로 좌파 상징을 밀어내는 것은 국가 전반의 우경화를 노리는 것이므로 냉소로 넘길 일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적 역사 해석은 홍범도처럼 일관된 반제국주

의 투사, 노동계급 투사의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친제국주의·친자본주의 인생의 가치를 올리는 효과를 노린다.

8월 31일 국회 연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는 해군의 최신 잠수함인 홍범도함의 이름까지 바꾸겠다고 했다. 군 최정예 무기의 이름을 대통령 지시와 군의 동의 없이 총리가 독단으로 바꾸겠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발언의 배후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독립운동은 ...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습니다. ... 우리의 독립운동은 주권을 회복한 이후에는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으로, 그리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 민주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독립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 전체를 우익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 지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한국 지배계급의 친일·친미 경력과 지향을 포장하고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그들의 공으로 돌리는 데 안성맞춤이다.

또한 서방(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노선에 부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그 속내를 이렇게 표현했다.

“육사 내 홍상 모델은 6·25전쟁 영웅,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의를 기리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보훈부 장관 박민식이 광주광역시 정월성 기념공원 추진을 갑자기 공격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월성은 광주 출생 작곡가이자 독립운동가로 일제 때 중국 공산당에 가입해 항일 운동을 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군가들이 그의 작품이다. 잊혀진 독립운동가였던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의 우호 친선의 한 징표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우파 정부들도 정월성 기념을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다. 그런데 이제는 정월성 기념이 정부 노선과 공식적으로 모순되기 시작한 것이다.



홍범도 장군이 러시아 혁명 정부와 연대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한 것은 옳고 명예로운 일이다

홍범도와 소련 공산당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소련 공산당에 가입했고, 1921년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있어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에 홍범도 홍상이 걸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범진보 측의 주된 반박 논리는, 당시 연해주·만주에서는 러시아 혁명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고 공산당 가입은 그런 필요를 위한 실용적인 교육지책이었다는 것이다.

일리 있으나 꽤 회피적이다. 홍범도는 어릴 때 머슴 생활도 했던 노동자 출신으로 최고 실력을 자랑하는 포수 출신이기도 하다. 한일 병탄 이전에 이미 간도와 함경북도 북부를 무대로 항일 무장 투쟁을 시작한 홍범도는 1918년 창당한 한인사회당(이동휘가 주도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입당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 이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과 가까웠다.

홍범도는 러시아 혁명 정부와의 연대를 중시했으며, 1927년 러시아 공산당

가입 이후 평생 당적을 유지했다. 그러나 홍범도가 진짜 사회주의자는 아니라고 봐야 한다는 변호론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수세적이고 군색해 보인다.

만주·연해주에서의 불가피성으로 변호하는 논리는 또한 한반도 국내에서 조선공산당에 가입한 독립운동가들의 선택을 일관되게 변호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런 변호론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은 지받기 어렵다는 암묵적 가정을 전제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홍범도와 동료 독립운동가들이 당시 러시아 혁명 정부와 연대하려 하고, 또 사회주의를 지지해 공산당에 가입한 것은 옳고 명예로운 일이다. 뒤집어서 말하면, 스탈린 반혁명(1928년) 전의 러시아 혁명 정부가 진지한 독립투사들을 지원해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은 러시아 혁명 정부의 명예이기도 하다.

제국주의 전쟁이었던 제1차세계대전을 끝낸 것은 1917년 러시아 혁명과 1918년 독일 혁명이었다. 러시아 혁명 정부는 노

독립운동을 포함한 한국 현대사 전체를 우익 정치와 자유시장 경제 지향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쓰고 있는 것이다.



자유시 참변 러시아 공산당과 홍범도에게 책임이 있나?

동계급 국제주의를 표방하며 러시아 제국의 옛 소수민족들에게 민족자결권을 선포했고, 그 영역을 넘어서는 피억압 민족의 해방 운동을 지지·지원했다.

한국 독립운동 안에서도 1918년부터는 사회주의 계열이 생겨난다. 1919년 3·1 운동은 그 과정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코민테른(공산주의 인터내셔널)이 공동여 소집한 1922년 극동민족대회에 자국 내 운동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선 조선, 중국, 몽골에서 온 참가단이 꼽혔다.

특히, 이 시기 한국의 독립 운동은 러시아 혁명 지도자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었다.

첫째, 레닌과 트로츠키는 한인 공산당 조직들을 통해 직접 거액의 자금과 사람을 지원했다. 무엇보다 러시아 혁명 자체가 한국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고 고무했다. 러시아 혁명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미국의 윌슨도 민족자결권을 말했지만, 그것은 제1차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해당되는 것이었다. 미국은 동료 승전국 일본을 지지해 조선의 독립 염원은 외면했다.

둘째, 제1차세계대전 승전 강대국들(14개국)이 러시아 혁명을 파괴하려고 반혁명적 군사 개입을 감행했다. 일본은 간첩군의 일원으로 연해주와 시베리아를 침략하고 만주를 위협했다. 러시아 혁명과 한국의 독립운동, 중국의 항일 투쟁 등은 공동의 적에 맞서야 했다.

셋째, 한인 사회주의자들은 당시 이미 조선의 지배층과 평민들 사이에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름을 깨닫고 있었다. 초기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당시 일제의 강점을 민족적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반제국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따라서 러시아 혁명과 조선 독립, 세계적 변혁이 서로 연관돼 있다고 본 문헌들이 존재한다. 러시아 혁명 정부와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노동계급 국제주의가 식민지 민중에게 어떻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실천으로 입증하려고 했다.

스탈린의 시대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홍범도 본인으로 치면, 1922년 모스

코바 극동민족대회 한국 참가단 중에서는 당시 유일하게 레닌과 트로츠키와(그 둘의 요청으로) 동시 면담을 하고 찬사와 환대, 지지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1928년 반혁명의 지도자 스탈린에게서는 짐짝 취급을 받았다.

스탈린은 자국 보호를 우선하고 대러시아 국수주의를 부활시켰다. 그 결과 일본을 자극할까 봐 극동의 항일 투쟁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독일과 일본의 협공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중국에선 공산당을 국민당에 복종케 해 재앙을 낳았다. 소수 민족 탄압의 일환인 강제 이주 정책으로 홍범도는 카자흐스탄으로 연해주 한국인들과 함께 강제 이주를 당해 고생스런 노년을 보내게 된다.

레닌과 스탈린

노년의 카자흐스탄 시절 등을 다룬 자료들을 보면, 홍범도는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있다. 레닌에게 선물 받은 권총을 평생 애지중지했다는 증언도 있다. 독일의 소련 침공 직후에는 70대의 나이에도 항독 전투에 참전하겠다고 자원까지 한다. 홍범도가 러시아 국가의 성격 변화에 대해 명료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레닌 생전의 불세비즘 전통에 매료돼 사회주의 신념을 유지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이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스탈린 체제의 악행과 폐습, 변질을 이용해 레닌주의와 사회주의 전통 전체를 비방하는 것이 우파의 전매특허라는 점이다. 레닌 시대와 스탈린 시대의 차이는 지도자 개성의 차이 문제가 아니다. 실천이 판이했고, 던고선 계급 기반이 전혀 달랐다. 레닌주의와 스탈린주의 사이에는 “피의 강물”이 흘렀다.

윤석열 정부와 우파가 홍범도가 레닌과 협력한 것이 도덕적·정치적 흠결이라든가 되는 양하는 것은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홍범도 등 당시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국제 사회주의로 기운 것, 러시아 혁명이 이들의 신뢰를 얻은 과정이나 초기에 이룩한 진보는 피억압 대중의 관점에서 대단히 명예로운 역사이다.

1921년 자유시 참변을 교조적인 러시아 공산당이 사악하게도 한국인 독립군을 속여서 무장해제시키고 학살한 듯이 말하는 것은 왜곡이다.

자유시 참변은 불행히도 러시아 혁명 정부측과 독립군이 일본군에 밀리던 상황을 배경으로 한인 사회주의자들끼리 주도권 다툼으로 분열하면서 벌어진 비극이었다. 1918년 창당된 한인사회당은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로 분열해 1921년 각각의 고려공산당을 창당한다.

당시 만주(간도)·연해주를 무대로 한 한국 독립군들은 일본이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 대대적인 민간인 학살을 감행하자 불가피하게 북쪽으로 후퇴한다. 러시아 극동 정부도 백군을 도운 일본군에 밀려 후퇴한다. 독립군들은 러시아령 자유시에 모여 군대 통합을 하기로 한다.

그런데 러시아 극동공화국은 자유시 입성시 일단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군이 러시아령 내 한인 독립군을 문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숨 돌릴 시간을 갖자는 계산이 있었던 듯하다.

당시 모스크바의 러시아 정부와 공산당 중앙의 방침은 조선 독립군들이 통합을 이루고 러시아 영토 내에 머물면서 적당한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체되는 통합을 힘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상하이파가 주도하던 일

명 사할린 의용군(대한의용군이라고 함)은 무장 해제 요구를 거부했다. 비사회주의 계열 부대들도 무장 해제 요구를 놓고 분열했다. 상하이파의 무장 해제 거부는 코민테른 극동국과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해 만든 사실상의 통합 지휘부(고려군정의회)의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결국 고려군정의회 지휘부가 무리한 강제 진압에 나선다. 이 과정에서 적어도 수십 명이 죽고 900명 가까운 독립군이 체포됐다.

홍범도는 자유시 입성 때는 군대 통합이 급선무라고 여겨 이르쿠츠크파의 요구에 협조했지만, 양측 모두의 분열주의에 비판적이었던 듯하다. 기록에 따르면, 자유시 참변 이듬해 열린 극동민족대회 때 레닌·트로츠키와 가진 면담에서 홍범도는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르쿠츠크파의 책임이 더 크다며 체포된 병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고 한다.(이후 병사들이 석방됐다고 한다.)

코민테른은 이후 이르쿠츠크파와 상하이파를 모두 해산시키고 1년여 동안 직접 관여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레닌 사후, 1927년 트로츠키마저 공산당에서 쫓겨나면서 코민테른이 정치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우파의 흑색선전과 달리 러시아 공산당과 홍범도 양자는 자유시 참변에 책임이 없다. 자유시 참변은 좌파 내 분열주의의 해악을 보여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신간 소개자

한·일 관계 - 민족주의 아닌 국제주의로 보기
일제강점기부터 위안부·강제동원 합의까지

김승주·하세가와 사오리 지음
노동자연대, 132쪽, 4,000원

※ 구입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홍콩 마르크스주의자가 말하는 중국 경제 위기

부동산발 위기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람치령에게 현 상황에 관해 물었다. 람치령은 좌파 단체 '레프트21' 회원이다.

최근 중국 경제 위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헝다그룹(恒大集團)이 8월 17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헝다그룹은 3300억 달러(435조 원)의 채무 불이행에 직면해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파산을 선언할 경우 중국 금융 시스템 전체와 세계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주요 부동산 개발 업체인 비구이위안(碧桂園)의 부채도 2000억 달러(263조 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부동산 붕괴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2008년 초에 이미 중국 주요 도시의 부동산 거품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40조 위안(7253조 원)을 투입해 시장을 구제한 덕분에 경제가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거품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중국이 “리먼 사태”에 봉착해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잘못된 관리”나 “지속 불가능한 대출” 때문이 아니라,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이 자본주의 투기 시장의 일부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중국의 생산 부문이 쇠퇴함에 따라 “거품”으로 알려진 투기 행위가 계속되고 악화돼 중국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를 촉발했습니다. 이는 서구 제국주의 나라들과는 다른 “중국식 발전 모델”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관련 기사: '중국 경제의 위기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중국 정부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시진핑 정부가 헝다와 같은 부동산 개발 업체를 구제할지 여부에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현금이 부족한데, 지방 정부 부채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약 25퍼센트에 달하고 ‘지방정부융자기구들’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 살인적인 청년 실업률을 풍자하는 ‘사망 졸업식’이 대학가에 유행하고 있다

(LGFVs, 지방 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 법인)까지 합치면 총 지방 정부 부채는 GDP의 60퍼센트에 육박합니다.

중국 정부는 부동산 기업 부도 위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게 더 쉽게 신용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민간 자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31가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목표라고 내세워 온 “공동부유”가 “결코 평등주의나 복지주의와 같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정부는 이른바 국가 안보와 간첩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과 신장 등 소수민족 거주 지역을 포함한 자국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신장을 방문한 시진핑은 신장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듯 한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제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실업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1.3퍼센트에 달합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퍼센트에 달합니다. 그러나 8월 중순에 중국 정부는 실업률 통계를 더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노동자와 평범한 도시민들은 알뜰한 소비마저 더욱 꺼리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저축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는 내수 부족과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를 유지해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초중등 교육에서 악화하던 사교육 문제와 의료계 부패를 단속하는 입장을 취했지만, 노동계급 가정은 교육 및 의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의료 · 주택 · 교육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을 의미하는 “새로운 세 개의 높은 산(新三座大山)”*은 여전히 중국인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가 대중 정서와 저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중간계급 사람들도 현재의 생활 조건에 불만을 느끼고 있으며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실업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만연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만과 전쟁이 발발하면 물가가 급등하고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고 말하거나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탕핑”(躺平)*을 주장합니다.

그렇다고 대중이 탈출구를 찾을 수 없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제로코로나] 통제 · 봉쇄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행동과 폭스콘 노동자

들의 파업은 대중이 때가 되면 집단행동을 할 것임을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봉쇄 · 통제 정책의 극적인 종식과 함께 ‘백지 시위’는 끝났지만 투쟁 과정에서 대중의 자신감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대학과 지식인 청년들(해외에 있는 중국 유학생 포함)이 사회의 미래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조짐도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3년 동안 중국 본토에서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청년들의 온라인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상하이와 베이징 같은 도시에서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젊은 여성들이 백지 시위 기간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가의 통제와 인터넷 감시가 극도로 엄격한데도 진보적인 청년들의 사고가 활성화되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입니다.

인터뷰 김영익 / 번역 박이랑

용어설명

삼좌대산(三座大山)

과거 혁명기에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은 중국 인민이 극복해야 할 세 가지 큰 문제로 봉건주의, 제국주의, 관료자본주의를 꼽았다. 이를 ‘삼좌대산’, 즉 세 가지 큰 산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에 많은 중국인들이 이 말을 빗대어 의료·주택·교육 문제가 신삼좌대산이라고 말한다.

탕핑(躺平)

“누워서 쉰다”는 뜻으로, 열심히 일해도 소용 없으니 최선을 다해 눕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다.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어가 됐는데, 그만큼 중국 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불만을 표현하는 말이다.

중국 경제의 위기가 서방 경제와 본질이 같음을 보여 주다

부동산발 중국 경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류 언론에서는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사회주의” 때문이라는 일부 논평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동아일보>는 시진핑이 공동부유 같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조해 민간 기업이 위축돼 위기가 왔다는 기사를 실었다. 중국 정부의 부동산 기업 규제로 인해 이번 위기가 촉발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위기의 악화를 억제하려는 규제 정책을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지구상에 사회주의가 아닌 나라를 찾아보기가 불가능할 것이다. 모든 정부가 필요할 때는 그런 정책을 써 왔기 때문이다. 2008년 월스트리트 공황 때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라는 말도 나왔다.

사회주의를 국가 통제나 국유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동아일보> 같은 우파만이 아니라 좌파들 사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생각이다. 그런 좌파 중 일부는 우파의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맞서 사회주의를 방어하겠다고 중국 경제가 위기라는 현실을 부정하기도 한다. 자본주의를 사적 소유와 동일시하고, 사회주의를 국가 소유·통제와 동일시하는 오해 때문에 벌어지는 웃지 못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큰 혼동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서방 각국의 경제도 평균적으로 3분의 1가량은 국가 부문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위해 국가의 개입을 늘리고 있다.

소위 ‘혼합경제’론은 사회주의/자본주의의 의미를 이런저런 경제 정책 정도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본주의는 그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사회 체제를 가리키는 용어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하는 것은 민간 소유나 국가 소유나 하는 형식적 틀이 아니라 그 사회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핵심 동학이 무엇이나를 중심으로 규정돼야 한다.

자본주의는 자본축적을 위한 경쟁을 핵심 동학으로 하는 체제이다. 그를 위해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착취해서 잉여가치를 뽑아낸다.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유지되기 위해 국가는 언제나 필수적이고 중요한 요소였다.

엥겔스는 이미 19세기 말에 국가의 이런 구실을 사회주의적 대안과 혼동해



서방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경제 위기의 고통은 노동계급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엥겔스는 국가 통제와 국유화가 사회주의라면,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도 사회주의 운동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의 박정희 유신체제를 “동구권 바깥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나라”라고 불렀던 경제학자도 있었다.

마르크스가 말한 진정한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이 스스로의 필요에 맞게 경제를 민주적으로 계획해서 운영하는 사회이다.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이 사회주의의 본질이라고 봤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중국은 사회주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회임이 분명하다. 중국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자 권력은커녕 노동기본권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우선순위

시진핑이 최근 경제 불안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삶은 뒷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 비구이위안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중국 정부는 비구이위안이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위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비구이위안은 직접 고용한 직원만 7만 명이고, 협력업체가 3만 3000개에 달한다.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부도 위기 기업을 무상 국유화하고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정책을 쓸 수도 있겠지만 중국 정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대신 금리를 인하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구매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고, 주식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자본거래세를 대폭 감면하는 등 시장

활성화에 매달리고 있다.

또, 중국 정부는 지금의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최근 시진핑이 ‘서구식 소비 주도 성장’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는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는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이다. 대중의 생활수준 개선이 아니라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이다. 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축적 압박이 중국 국가의 최고 우선순위가 돼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미국 등 서구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중국의 국가 부문도 자본축적과 패권을 위한 국제적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동학에 따라 작동한다. 이는 전형적인 자본주의 동학이고, 중국을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 형태인 국가자본주의로 볼 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적잖은 좌파들이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은 모종의 자본주의로 보면서도 그 이전 마오쩌둥 시기는 사회주의라고 본다. 사적 소유가 발전하지 않았고, 경제가 국유화돼 있었다는 것이 이유이다.

그러나 마오쩌둥과 개혁개방 지도자들은 많은 점을 공유하는 탓에 마오쩌둥의 중국을 사회주의라고 보면 현재의 중국에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남아 있어 (또는 부활할 여지가 있어) 서방보다는 진보적이라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제국주의 경쟁이 격해지는 현 정세에서 미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 국유화 여부가 아니라 사회의 실제 동학을 봐야 한다.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도 다른 열강과의 경쟁이 최우선 순위였고 이를 위

해 노동계급을 착취했다는 점에서 국가자본주의였다.(관련 기사: ‘마오쩌둥의 중국은 사회주의 사회였을까?’)

마오쩌둥 사후에 개혁개방 정책으로 바뀐 것은 왜곡적 국가자본주의에서 다국적 국가자본주의로의 부분적 형태 변화일 뿐이다.

따라서 중국도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을 피할 수 없다. 첫째, 경제 위기이다. 최근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듯 중국도 이윤율 저하, 과잉생산,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기도 심화시키는 금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둘째, 중국에서도 노동계급이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 둔화와 위기에 따른 고통은 노동계급에 떠넘기는 일이 많아질수록 시진핑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시진핑 정부는 억압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노동자들의 폭발적 투쟁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는 반증일 뿐이다.

중국 노동자들의 이런 투쟁은 (중국을 사회주의로 보고 중국 정부를 지지하는 좌파 일각의 생각과 달리) 진정한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을 촉발할 수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서방 노동자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압제자에 맞서는 투쟁은 한국 등 친서방 진영에서도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미중 갈등이 격해지는 오늘날 중국 사회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보고 서방의 압박에 맞서 방어해야 할 대상으로 여긴다면, 중국에서 벌어지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일관되게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을 자본주의보다 못한 사회로 본다면, 서방의 압박을 반대하지 않는 길로 빠질 것이다.

어느 경우든 사실상 중국이나 서방 지배자들 중 한쪽 편을 드는 것이다.

중국 사회가 서구 사회와 형태상으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 성격이 똑같이 자본주의라고 봐야만 지배자들 중 어느 한 쪽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을 일관되게 지지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만이 진정한 사회주의를 이룰 길이다.

정선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프리고진 사망의 배후보다 배경을 봐야 한다

우연한 사고처럼 보이는 일은 대개 정말로 우연한 사고일 때가 많다. 그러나 그렇게 믿기 힘들 때도 있다. 러시아 바그너 용병단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한 것이 바로 그런 경우다.

프리고진의 암살을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일설에 따르면, 프리고진이 탄 비행기가 격추된 것은 지난 6월 잠깐 동안 바그너 그룹이 모스크바로 행군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격추하여 승무원들이 사망한 것에 원한을 품고 누군가 복수를 감행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 해도 푸틴이 거느린 정보 기관들은 얼마든지 그 음모를 알아내고 푸틴은 원한다면 그것을 저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한 “전직 러시아 고위 관료”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들이 분명 프리고진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푸틴에게는 프리고진이 죽기를 바랄 만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 첫째, 반란의 대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푸틴이 그저 공포로 러시아를 다스린다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의 과장이다. 푸틴은 2000년대에 러시아의 안정을 회복시켰다. 러시아 올리가르히[소수 대부호들 — 역재가 축재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들 사이에서 보상과 처벌이 적절한 곳에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그런 안정기를 가져왔다.

그러나 푸틴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대와 보안기관을 장악하고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그것을 무자비하게 이용할 태세가 돼 있었기 때문이다. 바그너 그룹의 반란은 그러한 외양에 균열을 냈고, 푸틴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푸틴은 자신이 통제력을 확실히



프리고진의 사망으로 푸틴의 통제력은 회복됐는지 몰라도, 러시아 제국주의의 응집력 약화는 피할 수 없다

하게 되찾았음을 보여 줄 필요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프리고진 사망 배후에 푸틴이 있다고 볼 만한 가장 설득력 있는 이유는 프리고진이 죽은 시점에 있었다. 프리고진의 죽음은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분열된 억압 기구들에 대한 통제력을 서서히 되찾는 과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벌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 병력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았다. 원래 바그너 그룹이 활약하던 중동과 아프리카의 보호국 정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특사들이 파견됐다. 바그너 그룹에 호의적이었던 고위 장성 세르게이 수로비킨도 프리고진 사망 직전 해임됐다.

프리고진과 함께 사망한 사람들 중에는 흉악한 파시스트인 드미트리 웃킨이

있다. 러시아 정보총국(GRU) 중령 출신인 웃킨은 2014년 바그너 그룹을 설립했다. 그 이름은 유대인을 혐오한 독일인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프리고진이 그 용병단의 대표였다면 웃킨은 작전 사령관이었다. 처음에 그 용병단은 푸틴과 러시아 정보총국이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해외 작전을 벌이는 데 활용됐다.

독일 외교협회의회의 안드라스 라츠는 이렇게 평했다. “비행기를 추락시킨 게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럼으로써 바그너 그룹의 재정적 지도자와 군사적 지도자를 한 방에 제거해 버렸다. 프리고진과 웃킨을 한꺼번에 무력화시킬 일석이조의 기회였던 것이다.”

바그너 그룹의 머리를 베어 버린 것은 좌와 우 모두를 겨냥한 더 광범한 단속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일명 “스트렐코프”라고 하는 이고르 기르킨도 최근 체포됐다. 기르킨은 러시아연방보안국(FSB) 출신으로 원래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지역에서 활약했던 자다.

오랜 세월 동안 스탈린주의에 반대하고 전쟁에도 반대해 온 저명한 사회주의자인 보리스 카갈리츠키도 “테러를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명예교수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장

정당화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수감됐다.

프리고진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국수주의적 극우와 중·하급 장교들 사이에서 그의 제거에 대한 만만찮은 반발이 일어날지는 지켜볼 일이다.

판도라의 상자

그러나 더 큰 상황을 보면 푸틴이 아마도 극우의 불만을 억누를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요인이 두 가지 있다.

첫째,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러시아군이 참호를 파고 구축해 놓은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 정부의 전략에 대한 미국 정부의 비판이 갈수록 여기저기서 새어나오고 있다.

둘째, 최근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의 전반적 의미가 무엇이건 간에, 그 회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줬다.

중동에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세 국가 —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이집트 — 가 중동 지역 미국의 최대 숙적인 이란과 나란히 브릭스에 가입한 것은 실로 괄목할 만한 변화다.

따라서 푸틴의 입지는 [프리고진이 반란을 일으켰던] 지난 6월에 보였던 것보다 더 강력해졌다. 이로써 푸틴은 바그너 용병단의 반란이 촉발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제국주의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응집력이 약화됐다는 것은 여전히 참말이다. 판도라의 상자를 다시 닫기는 어려울 것이다.

출처 Alex Callinicos, 'What's behind the death of Prigozhin?' (2023. 8. 28) / 번역 이원웅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olidarity.org/what-we-stand-for





정부의 징계 위협에도 9월 4일 행동을 성사시키려는 교사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공교육 멈춤 행동’을 지지하자

9월 4일 이후에도 투쟁은 계속돼야

교사들의 교육권 보호를 요구하는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수만 명의 교사들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 등을 사용해 참가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일 파면·해임 등을 언급하며 교사들을 위협하고 있다. 8월 24일에 이어 27일에도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못 박았다. 재량 휴업일 지정으로 집단행동을 돕는 교장에게도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심지어 교육부는 교사들이 사용한 연가·병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월 4일 행동에 동참한 교사들을 모두 징계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이다.

8월 29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때문에 교사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정부가 전반적인 긴축 재정을 추진하면서 유·초·중·고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교육부 예산은 95조 6254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3000억 원이나 줄었고, 특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지급되는 교육교부금이 9.1퍼센트(6조 9000억 원)나 감액된 68조 8859억 원에 그쳤

다. 8월 9일에는 내년 공립학교 교사 선발 인원을 올해보다 약 1500명이나 줄인다고 발표하더니, 교육 예산까지 대폭 삭감해 버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따라 민원대응팀 구성, 일시 분리 학생을 보호할 공간 마련과 지원 인력 배치 등만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 해도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데 말이다.

긴축 재정

이처럼 정부가 예산·인력 지원도 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내놓으며 교사들을 중징계로 위협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분노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한편,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은 공교육 멈춤 행동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교육청들도 징계를 위협하는 교육부의 협박성 공문을 각 학교로 내려보냈다. “교육부 공문을 안 보내면 이후 고발당할 수도 있다”며 말이다. 페이스북 등에 듣기 좋은 말만 올릴 뿐이지, 정식 공문으로 교육감이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교사 징계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자신들의 권한을 최대한 사용해 9월 4일

행동을 방어하는 일에 나서지는 않고 교육부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총은 공교육 멈춤 행동 대신 지역별로 저녁 추모제를 열자고 제안하며 정부 편을 들어 교사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일부 교사노조도 9월 4일 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조합원을 비롯한 여러 교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 당국을 압박하기 위해 더 큰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운영팀이 해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곧장 새로운 운영팀이 구성돼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미 10만 명 가까운 교사가 9월 4일 행동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을 뿐 아니라, 9월 2일에 ‘50만 교원 총궐기’라는 기치로 열리는 제7차 교사 집회에는 지방에서 최대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30일까지 집회 운영팀이 집계한 전세버스 대여 상황을 보면, 버스 500대에 1만 5000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6차 집회 때 전세버스 92대에 참가 인원이 2800명이었던 것과 견주면 5배가 넘는 것이다.

이런 기세를 이어 나가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이 최대 규모로 성사돼야 한다. 더 큰 행동이 벌어질수록 정부가 조직자들과 참가자들을 탄압하는 데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다.

이 점에서, 전교조 같은 좌파적 노동조합이 9월 4일 행동에 공식적·공개적 참가를 결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집회를 안내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찌질한 일이다.

일부 교사들은 학생·학부모의 불만을 사서 지지 여론이 꺾일 수 있다고 우려해 9월 4일 행동에 동참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여러 학생·학부모 단체들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에서 보듯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지지하는 진정한 여론이 만만찮다. 9월 4일 행동이 대규모로 벌어지면 교사들에 공감하는 학생·학부모들의 연대를 이끌어 내는 초점이 될 수 있다.

물론 ‘공교육 멈춤’ 행동 한 번으로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9월 4일 행동으로 교사들의 자신감이 성장하면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 나갈 토대가 될 수 있다.

9월 4일 행동 이후에도 정부에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받아 낼 때까지 투쟁이 이어져야 한다.

강동훈

내가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가하는 이유

교사들이 힘을 보여 줄 때 학교가 변할 가능성이 생긴다

전라남도 무안의 한 중등교사

엣그제, 등교 거부 중인 인혜(가명)의 부친과 통화를 하게 됐다.

인혜는 친구 관계가 파탄 나는 바람에 학교 생활에 의욕을 잃었다. 학교에 오더라도 4교시만 끝나면 집에 보내 달라고 떼를 쓴다. 인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었다. 전학을 가면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인혜는 학교에서 제안하는 모든 종류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거부했다.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와 학부모, 그리고 담임 교사에게 종합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거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조퇴를 시켜 달라는 인혜를 억지로 학교에 붙잡아 놓고 있는 것뿐이다.

인혜의 아버지는 답답했는지 나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정에서는 할 만큼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학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내 딸을 싫어한다고 하지요. 그럼 그 아이들 잘못입니까? 아니면 내 딸의 잘못입니까?”

관계의 문제에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응보적 관점에 순간 욕하는 마음이 올라 오기도 했다.

요즘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려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대체 그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래도 나는 인혜 아버지 입장이 이해가 간다. 가정에서 할 만큼 했다는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원인을 누군가의 잘못으로 치부하려 시도하는 건 당연한 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라도 잠깐 편안해지면 그나마 좋은 거니까. 물론 그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긴 하지만 말이다.

어제 인혜는 교실에 들어가기 싫다며 눈물을 쏟아 냈다. 요즘 학교 수업은 협력을 중시해 짝 활동, 모둠 활동을 강조하는 편인데, 인혜와 같은 모둠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없다. 수업 시간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니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2학기 들어서는 없던 반항기가 생긴 인혜는 눈빛도 달라지고, 말씨도 달라졌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솔직히 내 힘으로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이가 조퇴시켜 달라고 찾아올 때마다 나는 또 무력감에 시달린다.

담임 교사도, 부모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와 인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교육 당국의 지원이다. 학생들을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겨 두서는 안 된다. 상담 자원과 대안적 교육 자원을 동원해 교사를 지원해 줘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돌보는 교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사를 선발해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 당국은 현장 교사들의 SOS를 계속해서 외면해 왔고, 견디지 못한 교사들이 집회를 열자 그제야 미흡한 대책들을 내놓았다.

그렇기에 9월 4일로 예정된 '공교육 멈춤의 날'은 내게 한 줄기 희망이다. 인혜 같은 학생들을 종합적으로 돌보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 학교, 나와 인혜의 부모처럼 진퇴양난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줄 수 있는 학교,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다투게 만드는 환경을 애초에 조성하지 않는 학교.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들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일부 교사들은 우리가 학교를 비우면 인혜 같은 학생들은 어떡하냐고 내게 묻기도 한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수업을 빼먹어서, 학생 상담을 게을리해서 학교가 이 지경이 된 것이 아니다.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기에 권한이 있는 정부와 교육 당국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도록 우리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수업 한 시간, 상담 한 시간보다 더 많은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학교가 변해야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성사를 위한 교사들의 열망이 크다. 그 열망은 얹어질 위기에 처했던 9월 4일 집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교사들의 노력으로 이어지는 듯하다. 이 투쟁이 의미 있게 화생하고 더 많은 교사들이 동참하길 바란다.



8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6차 교사 집회

교사 지켜 주지 않는 교육부 행태가 참가의 결정적 계기

경상북도 포항의 초등 교사

4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선배 교사들에게 많이 들어 왔던 얘기 중 하나는 “열심히 하는 열정적인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다”였다. 나도 학생을 가르치면서, 특히 생활 지도를 하면서 많이 느낀다. 학생이 잘못했을 때 담임교사인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1년, 1년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못 본 척 넘어가고 포기하고 있는 내가 보여서 이제는 이런 공교육 시스템과 아동학대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게 됐다.

학부모 민원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자기 자녀의 아침 활동 짝이 마음에 들

지 않는다면 우리 반은 그 아침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 전화를 받았다. '나는 이 학부모에게 얼마만큼의 존재일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정말 수많은 민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민원을 감당하는 건 오롯이 담임의 몫이다. 서이초 선생님이 내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 교직에 계신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공감하실 거다.

마지막으로 9·4 파업에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현 교육부의 행태다. 사실 방학 때까지만 해도 9·4 파업 참여 여부를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우리 교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으니 고민할 것이 없어졌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래서 9·4 파업에 동참한다.



서이초등학교 앞 게시판에 가득 붙은 추모 메시지들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세종의 한 초등학교

주말마다 교사들이 수만 명씩 모이는데도 교육부·교육청은 학교에 실질적 지원을 해 주진 않고 또다시 학교 내에서 민원 담당팀을 만들라는 돌려 막기 식 정책만 내놓고 있다.

‘중대한’, ‘긴급한’ 일이 있으면 학생을 분리하거나 제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결국 사안이 중대했는지, 긴급했는지를 두고 법정 소송에 휘말릴 공산이 크다.

그리고 교권 침해 사안을 학폭처럼 생기부에 기재하란다. 학폭 담당만 맡아도 소송을 당하는 마당인데 말이다.

이렇게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외면해 온 교육부는 우리가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자 파면과 해임을 운운하며 서슬 퍼런 징계를 들이댔다. 조용히, 묵묵히 다시 자리로 가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일터에는 ‘작업중지권’이라는 게 있다. 사고가 났거나, 그럴 위험이 있으면 당장 일을 멈출 권리가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은, 사람이 죽고 있는 교육 현장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계속할 수 없다는 외침이다.

그 어떤 일이라도 “도저히 못 해 먹겠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하고 손을 놓을 권리는 있어야 한다. 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 손을 놓는 것도 안 된다면 상황을 바꾸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간다면, 한두 명씩 나가 보결하고 끝난다면, 교

육부는 결재 없이 나간 교사와 결재한 교장, 재량휴업을 한 교장을 손쉽게 징계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책을 내놓고 지나가려 할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우리가 지킨 각 교실에 그대로 묻은 채.

오랜 세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묵묵히 자리를 지켰다. 이렇게 10만여 명의 선생님들이 자리를 비우겠다고 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이번에 교육부는 징계로 위협하고, 교육감은(화려한 언론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일선 학교에 이첩하고, 교장들은 탄압 위협이 오자 재량휴업일 지정을 뒤엎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와 교원단체조차도 앞장서 우산이 돼 주기를 주저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의지를 전혀 꺾지 않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고민했다. 하지만 점차 거대해지는 주말 집회와, 우회 파업에 참가하려는 선생님들의 열의에 저절로 마음이 움직였다. 학교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선생님들을 모으고, 설득했다.

우리 학교는 재량휴업일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처음에 결의한 세 명이 뿔뿔 뿔쳐 주변을 모았고 3분의 2가 넘게 동참을 선언했다. 내 마음이 움직였듯이,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서고 뿔쳐야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야말로 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 교육을 바꾸고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

서울의 초등 특수교사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제까지 나는 ‘특수교사니까 이 정도는 혼자 감당해야 해’ 하는 생각으로 몸과 마음이 다치는 것도 개의치 않고 참 열심히 했다.

교육 활동 중에 다치면 병원 가서 치료받고,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지면 다시 새것을 준비했다. 어떤 제도적 지원도 없었고, 도움을 주는 관리자도 없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제자들의 삶도, 학교에서 외로운 섬으로 있는 나의 자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열심히,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통합교육을 위해 이것저것 고민하고 지원해 보려 해도 특수교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법정 특수학급당 학생 수 6명. “6명이 뭐 그렇게 많냐” 하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교사 1명이 학년, 반, 장애 유형, 개별적 특성 등 모든 것이 다른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해, 교육 계획을 세우고, 통합학급 담임교사와 협의해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어려운 행동을 중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일반 교사들 역시 녹록지 못하다.

주당 20시간이 훌쩍 넘는 수업에 30명 가까이 되는 학생들, 슈퍼맨인 듯

모든 과목을 혼자서 도맡아야 한다. 법정 의무 교육은 왜 그렇게 많은지. 교육 과정은 줄어들지 않는데 교육 당국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라고 한다. 교사와 학생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수업을 하기는커녕 ‘오늘도 무사히’를 속으로 되뇌며 학생들을 만나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업무는 줄어들 기미가 없다. ‘업무 정상화’가 수년째 이야기되고 있지만 학교 업무가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없다.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교육 당국이 내려 보내는 업무는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교육 상품화’, ‘교육 시장화’, ‘경쟁교육’. 이제는 이런 것이 너무 보편화돼 버린 상황에서 보호자는 교육 상품 구매자로, 교사는 교육 상품 제공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관계 속에서는 교사와 보호자가 상호존중하고 협력해 학생의 성장을 도모하기 쉽지 않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도 없고, 예산도 인력도 늘리지 않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교육과 복지를 제공해 왔다.

이러니 교육 현장의 붕괴는 예견된 것이었다.

얼마 전 현장에 나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교사가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진 온갖 책임의 무게에 눌려 내린 떠밀린 선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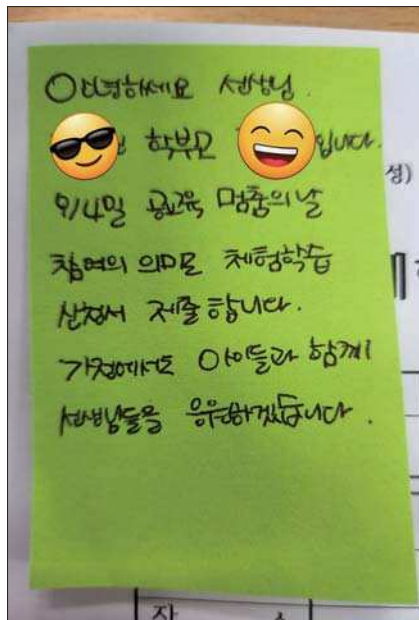
더는 동료 교사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전국의 교사들이 뒤를 따라 공교육 현장을 멈추고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입장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진보 교육감들도 좌고우면, 표리부동하는 답답한 태도를 보인다.

동료들과 함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절실하다.

한 사람이라도 더 참가해야 정부 탄압의 예봉을 무디게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더 많이 참가하자.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열망을 담아.



‘공교육 멈춤의 날’을 응원하는 학부모의 메시지

부끄러워해야 할 ‘좌파’ 노조 지도부

전교조는 연가 투쟁을 결정했어야 마땅하다

강동훈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행동이 임박하자 교육부는 연가·병가를 사용할 경우 최대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부의 징계 위협이 커지자 집회 운영팀 내에서 논쟁이 격화돼, 8월 26~27일 사이에 기존 집회 운영팀이 해산하고 다시 구성되는 일이 벌어졌다. 8월 25일 교총은 집단행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교사노조연맹 중앙은 ‘공교육 멈춤의 날’을 허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처럼 대규모로 터져나온 교사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를 두고 기로에 놓인 시점이었던 8월 26일에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개최됐다. 여기서도 단연 중요한 쟁점은 9월 4일 행동에 어떻게 연계될 것이냐의 문제였다.

그런데 전교조 지도부가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계획은 9월 4일 행동을 조합원 개인에게 “안내”한다는 지침이었다. ‘공교육 멈춤의 날’에 공식적·공개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었다. 또, 9월 4일에 조합원 중앙(서울) 대회와 지역 대회를 동시에 개최하는 계획을 내놓아, 서울에 집중해 힘을 보여 주려는 수많은 교사들의 의지를 분산시켰다.

이에 <노동자 연대> 신문 지지 대의원을 포함한 일부 대의원들이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안은 전교조가 서울 집중 투쟁 방침을 세우고, 전 조합원 연가, 병가, 재량휴업 동참을 결정하고 대내외에 호소해 행동에 참가하려는 조합원·비조합원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우산이 돼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의원들은 전교조가 갈림길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9월 4일 집단행동을 방해하는 세력 앞에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행동에 참가하려

는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운동의 확산에 이바지할 것인지 사이에서 말이다.

애석하게도 이 수정안은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을 못 얻어 부결됐다. 전교조 지도부에 설득된 다수 대의원들은 전교조가 대외적으로 조직적 참여를 발표하면 교사들의 반발을 살 것이라고 우려한 것이다.

그러나 소심한 생각이다.

대부분 전교조가 배출한 진보 교육감들은 지금껏 학내의 다양한 갈등을 방임하고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넘겨 온 데 한몫 했다. 그래서 교사들의 지탄을 받아 온 그들의 일부가 9월 4일 행동을 지지하자 교사들 사이에서 진보 교육감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반대로 교총은 9월 4일 공교육 멈춤 행동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히며 보수적 교사들을 결집시키려 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9월 4일 행동에 조직적 참가를 결정하고 대외적으로 표명하기를 거부했다. 그럼으로써 운동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피하고 있다. 이런 소심함과 기회주의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대규모 교사 운동에서 전교조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교사 운동이 기로에 선 시점에서, 전교조는 운동에 공식적·공개적으로는 동참하지 않는 소심한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의 진보 교육감 동행이 낳은 후과

전교조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은 한두 해 된 일이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을 당선시키고 그들을 통해 교육을 개혁한다는(개혁주의) 전략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운동에는 영향력이 점차 떨어져 왔다.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자(국가 기구인) 교육청을 활용해 교육을 바꿀 수 있다는(허망한) 기대를 갖기 시작했다. 일부 활동가들은 진보 교육감을 도와 교육청을 바꾼다며 장학사, 보좌관 등으로 교육청에 들어갔지만 대개는 들 어간 활동가들 자신이 바뀌었다.

진보 교육감들은 지지해 준 사람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여느 국가 관료들과 별 차이 없이 처신했다. 교육청을 견인하라고 파견된 사람들이 역으로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투쟁적 교사들은 전교조를 진보 교육감과 함께 도매금으로 취급하기에 이르렀다.

전교조는 진보 교육감과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하면서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거듭 후퇴했다. 진보 교육감들이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염원을 내팽개치는 데도 전교조는 제대로 맞서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 요구를 거부했을 때 전교조도 보수적인 조합원들을 추수하며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요구를 거부한 것은 많은 기간제 교사들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게 했다.(임용고시를 둘러싼 허위의식이 핵심적 문제였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과 협력의 관계를 우선하는 전략은 자신의 조합원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표 사례가 2019년 광주에서 배이상현 도덕교사가 성평등 수업을 했다가 직위해제 된 사건이다. 당시 광주교육감은 몇몇 학생이 수업 중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배이상현 교사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몰아 직위해제 했다.(배이상현 교사가 개혁 약속을 안 지키는 교육감을 비판한 것에 대한 보복 성격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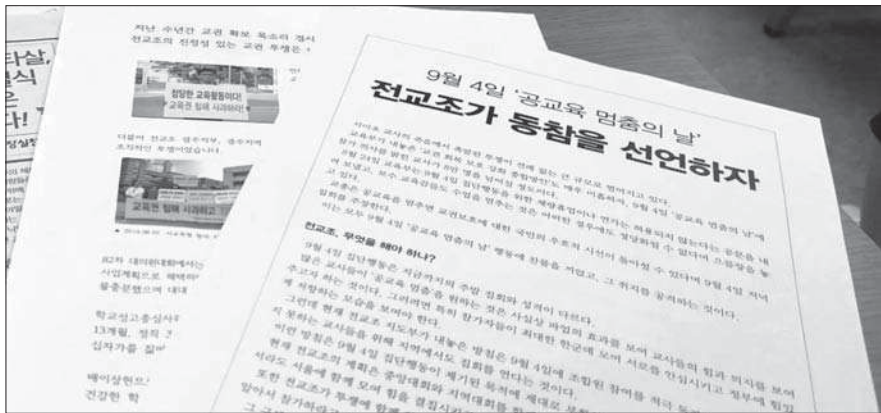
하지만 전교조는 광주교육감을 규탄하고 배이상현 교사를 방어하는 데 나서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전교조 여성위원회는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는 듯 독단적으로 왜곡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배이상현 교사의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다.

비정규직 교직원에 대한 방어는 고사하고 정규 교사인 자신의 조합원마저 제대로 방어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일들이 누적되면서 많은 투쟁적 교사들이 전교조를 크게 신뢰하지 못하게 된 듯하다.

결국 투쟁을 멀리하고 진보 교육감(그리고 민주당 정부)과의 협력에 기대는 동안 노조의 진정한 힘인 조직력과 투쟁력은 점점 약해졌다.

지난 4차 집회 때 연단에 오른 전교조 전회영 위원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더 키우고 그 운동 안에서 투쟁적 목소리를 키우려 노력하기보다 공을 국회로 넘기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런 개혁주의로는 약화된 투쟁력과 조직력을 만회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는 전교조의 방향은 전교조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전교조의 공식적 동참을 호소한 리플릿

중국 내 반일 감정 확산

중국(한족) 민족주의에는 오늘날 아무런 진보성이 없다

김인식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 폐수를 방류하자 중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중국 인들은 주중 일본 대사관·공관뿐 아니라 일본 인 학교·식당에 돌과 계란을 던졌다. 또, 일본에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었다.

중국 정부는 백지 시위와 달리 반일 행동을 사실상 독려하거나 용인하고 있다.(중국 외교부는 “바다는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하고 격하게 발표했다.)

시진핑 정부는 경제 위기로 인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데 반일 감정을 활용하는 듯하다.

시진핑 정부는 부동산 위기, 사상 최고의 청년 실업률 등으로 사회적·정치적 불안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시진핑 정부는 민족주의(중국에는 상이한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으므로 정확하게는 한족 민족주의다)를 이용해 서로 다른 계급들을 공동의 행동으로 모으려 한다.

한 여성이 베이징 시내 슈퍼마켓의 텅 빈 소금 제품 선반 앞에서 “모두 일본 때문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다는 언론 보도는 민족주의의 효과를 보여 준다.

그러나 반일은 모호한 말인 데다 흔히 일본인 전부를 반대한다는 뜻으로 오해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일본은 단일한 하나가 아니다.(본지 471호 하세가와 사오리가 쓴 ‘일본인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관동 대지진과 학살 100년은 그것의 역사적 실례를 보여 준다.)

핵 폐수 방류 문제만 하더라도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매우 많다(16면에 실린 ‘우석균 반핵의 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일본에서도 핵 폐수 방류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큼니다’를 보시오).

기시다의 지지율은 겨우 30퍼센트대로 2021년 집권 이후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반일”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몽둥으려 반일을 주장하면 서방 제국주의(이 경우 일본과 미국)와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라는 타격을 놓칠 수 있다. 그리 되면 핵 폐수 방류를 반대하는 일본인들이 무시돼, 오히려 일본 정부(와 바이든, 윤석열)의 입지가 강화될 위험이 있다.

1941~1945년 독소 전쟁 때 일이다. 당시 스탈린은 그 전쟁을 “애국 전쟁”으로 묘사하며 독일인 전체를 적대하는 민족주의를 부추겼다. 소련 공산당의 기관지 <프라우다>에는 “독일인을 죽여라!”는 머리기사 실렸다.

이런 감정적 데마고기 선동 탓에 베를린이 점령될 때까지 독일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에 등을 돌리기 어려웠다. 스탈린의 러시아 민족주의는 독일 국민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나치의 주요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강화했을 뿐이다.



오늘날 중국 민족주의는 중국 내의 계급 분단과 소수민족 억압을 흐리고, 중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구실을 한다

민족주의는 원래 중간계급의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기

마르크스주의는 민족주의란 중간 계급의 친자본주의 이데올로기이고 그 핵심 효과가 노동자들을 지배자들에게 속박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 민족이 아니라 자기 계급에 충실하도록 고무해야 한다.

그런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민족적 요구나 민족 분리를 노동자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레닌은 강조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들에게 “조국이 없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르크스·엥겔스와 레닌이 피억압 민족의 해방 투쟁을 무시한 것은 아니다. 마르크스·엥겔스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배와 잉글랜드인들의 아일랜드인 차별을 반대했다.

레닌은 억압하는 민족(영국과 러시아)의 민족주의와 억압받는 민족(아일랜드와 폴란드)의 민족주의를 구별했다. 그는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 투쟁을 지지하지 않는 명분으로 민족주의를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을 비판했다.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말이다.

“식민지와 유럽에서 소수민족들

의 반란이 없이도, 온갖 편견을 지닌 프티부르주아지의 혁명적 분출 없이도 사회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것은 사회 혁명을 거부하는 것이다. ... ‘순수한’ 사회 혁명을 기대 하는 사람은 살아서 혁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중국의 한족 민족주의는 결코 억압받는 민족의 민족주의가 아니다.

한족 민족주의는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억압에 반발하며 생겨났다 하지만 이미 1949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은 위구르인과 티베트인 등 소수민족의 자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억압한다(본지 461호 ‘중국의 소수민족과 저항’을 보시오).

레닌이 억압받는 민족(또는 종족 국민)의 해방 투쟁을 지지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런 투쟁이 제국주의를 타격하고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1975년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도 마찬가지 효과를 냈다.

그러나 제국주의는 단지 미국 같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한다는

뜻(식민주의)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경쟁하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위계적 세계 시스템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심화됐고, 대기업들은 국가와 상호의존 관계를 맺으며 국제 무대에서 다른 나라의 대기업들과 경쟁한다. 국가는 군사력·외교력으로 자국 기업의 이윤 추구 활동을 뒷받침한다.

제국주의는 이렇듯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과 그 기업들의 영향력 투쟁을 가리킨다.

현재 중국은 영향력 재분할을 위해 미국·일본 등과 지정학적·경제적 경쟁을 벌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족 민족주의(소위 중화주의)는 제국주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족 민족주의에는 오늘날 아무런 진보성이 없다.

우리가 특정 민족 운동을 지지할지 말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그 운동이 억압받는 민족(국민)의 것이고 제국주의에 정말로 맞서는 것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그 반대로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운동은 반대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과 범죄

장호중 의사, <노동자 연대> 기자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다른 환자와 마찬가지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돌봄이 필요하다. 많은 경우 만성적이고 일상생활에

도 어려움을 겪는 반면 병원에서 해결해 주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증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병적 상태에 있다는 인식(병식)이 없거나, 약물 부작용 등 다양한 이유로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안타깝게도 소수 환자들의 경우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신질환 범죄가 오늘날 중요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된 이유다.

중증 정신질환자를 돌보기에 역부족인 가족과 환자 사이에는 갈등이 빈번해지고 심한 경우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지난해 벌어진 존속살해 46건 중 16건의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의 강력 범죄가 사람들에게 특별히 두려움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차별 범죄처럼 피해자가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없는 경우가 적잖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증 조현병 환자나 양극성 장애(조울증)를 앓는 사람들의 경우 망상이나 환각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평범한 사람들에게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사고의 비약과 분노 충동 조절 실패로 인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행동을 벌일 수 있다.

이 가능성은 설사 통계적으로는 빈도가 낮더라도 사람들에게 대단한 위협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치료 목적 외에도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명백한 위협이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을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먼저,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관한 처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강제입원 조치다.

전자는 치료감호라는 제도로 이미 시행되고 있다. 법원이 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한 달 동안 입원 상태에서 각종 정신과적 검사를 하게 된다. 한 달 동안 폐쇄병동에 입원한 채 24시간 내내 관찰하므로 어지간해서는 거짓말로 정신질환이 없는 것처럼 속이거나 반대로 있는 것처럼

속이기는 어렵다.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과거 진료 기록과 한 달 간의 검사,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범행 당시 정신질환의 증상이 범죄에 이르게 한 것이 맞는지 판단한다. 그 뒤 다른 정신과 전문의와 병원장 등이 참여하는 검토 회의를 거쳐 판사에게 소견을 전한다. 판사는 그 소견을 증거 중 하나로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로 판단할 경우 교도소에 머무르는 기간을 줄이거나 없애고 대신 병원에 일정 기간 강제 입원해 치료받게 한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까다로운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는 범행 당시의 증상의 종류와 강도를 직접적으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 유추하는데 알코올이나 마약 사용으로 인한 범죄의 경우 특히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사라진 뒤에 보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어렵다.

다만, 정신감정을 의뢰받는 정신과 전문의들의 경우,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진료해 본 경험이 많아서 증상이 악화하는 패턴과 지속 기간 등에 비교적 익숙하고 수사 기록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사실과 근접한 소견을 제시할 수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국내에서는 국립법무병원 한 곳에서 전국의 모든 법원이



사진 출처: freesvg

의뢰한 정신감정부터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환자를 치료하는 일까지 대부분 다 한다. 이 병원에는 원장을 포함해 5명의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데, 입원한 환자는 1000명이나 된다. 열악한 처우 때문에 2022년 원장을 제외한 4명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들을 비난하기는 어렵다. 의료 행위의 종류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시장화된 의료 체계에서 이런 일을 사명감 있게 하려는 의사가 저절로 생겨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공공 정신병원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의사 양성이 절실한 이유다.

비자의 입원

문제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려 할 때 생기는 어려움이다. 치료적 목적이라고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사실상 구속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과거에 정신질환이 원인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증상의 발전 양상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3가지 경우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각각은 보호입원과 행정입원, 응급입원으로 부른다.

보호입원은 보호자 주도로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강제입원시키는 것으로 무척 까다롭다. 재산 다툼 등 가족 간 불화가 강제입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정신질환을 진단받았고, 입원 치료 및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로 증상이 위중하며,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통해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강제입원이 된다.

입원 뒤에는 2주 안에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속한 정신과 전문의 2인으로 부터 같은 소견을 받아야 하고, 소견이

▶ 13면으로 이어짐

정신질환 환자들은 왜,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나?

모든 정신적 고통이 범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전체 정신질환자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비율은 0.2퍼센트 수준이다. 이는 전체 인구 대비 범죄자 비율 3.1퍼센트에 한참 못 미친다.(<연합뉴스>)

다만, 정신질환을 앓는 일부 환자의 경우, 다른 정신질환 혹은 정상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보다 특정 유형의 범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컨대 검찰이 발표한 ‘2022 범죄분석’을 보면 2021년 전체 범죄자 중 범행 시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전체의 0.7퍼센트로 극소수다. 그러나 살인과 방화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6.8퍼센트, 12.7퍼센트로 조현병 유병율에 비춰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2016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조현병, 조현양상장애, 조현정동장애, 망상장애, 단기정신병적장애)의 일년 유병율(지난 1년 동안 한 번 이상 해당 질병을 앓은 사람의 비율)은 0.2퍼센트였다.

흔한 오해와 달리 범죄 전문가들은 조현병의 특징인 “망상이나 환청이 높은 폭력성과 관계 없다”고 단언한다.(<옥스퍼드 대학 출판사, 《옥스퍼드 범죄학 핸드북》, 2012) 조현병 환자 전체가 폭력적이지는 않다는 뜻이다.

사이코패스?

조현병 환자가 늘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는 것도 아니다. 살인을 저지른 조현병 환자의 범죄 동기는 ‘정상’으로 분류되는 살인범의 범죄 동기와 공통점이 더 많다.(가정 불화와 우발적 동기가 전체의 40퍼센트 가량을, 기타와 원인 미상이 50퍼센트를 차지한다)

다만, 망상과 환청이 환자의 감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조현병 환자의 일부가 강력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가짜지만, 그들이 겪는 고통은 진짜다”.(차승민,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

“편집증 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로 괴롭힘을 겪는 사람들보다 [실제든 아니든] 가해자를 공격할 가능성이 적거나 많다고 여길 이유가 있을까.”(<옥스퍼드 범죄학 핸드북>)

실제로 망상과 환청 같은 증상이 완화되더라도 그 때문에 쌓인 두려움(과분노)이 폭발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잖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 흔히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나, 극단적 고양감에 과대망상이 발전하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이 범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신질환으로 꼽힌다.

최근 논란이 된 무차별 범죄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2017년에 ‘이상동기범죄’ 25건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25명 중 5명이 범행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었다. 5명 중 두 명은 범행 당시 환청이나 망상 같은 증상으로 유발된 것은 아니었다. 25명 중 17명은 알코올 의존자였고, 10명은 음주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윤선영 외, ‘묻지마 범죄자의 심리특성과 피해의식’)

요컨대 극단적 범죄의 원인이 정신질환에 있다고 일반화해 강제입원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강제입원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조리 반대하는 것도 이상주의이다.

문제는 누가 무슨 목적으로 강제입원을 시키며 그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점이다.

용어설명

정신질환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 중 병원 치료를 받거나 범죄를 저질러 국가가 개입할 때 공식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정신질환 혹은 정신장애다. 이 용어들은 환자나 범죄자들의 정신 상태가 평범한 사람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과는 거의 관계가 없는 예외적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난점이 있다. 다만, 아직 대안적 용어법이 자리 잡지 않은 상태라 이 글에서는 정신질환이라는 용어를 그냥 사용하고자 한다.

▶ 12면에서 이어짐

다를 경우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입원 후 한 달 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원 적합 여부 통지가 있어야 1개월 이상 입원 가능하다. 3개월 뒤, 그 뒤에는 6개월마다 심사를 받아야 입원을 연장할 수 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고 각 관할 구역에서 벌어지는 강제입원을 심사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와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은 각각 지자체장과 경찰(혹은 구급대원)의 관할 하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역시 만만치 않은 조건이 충족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정신과 의사들과 보호자들은 이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강제입원의 애초 취지인 신속한 입원에 어려움이 있고, 그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기보다는 보호자와 의사, 일부

공무원에게 맡겨 둬으로써 법적 분쟁에 휘말릴까 봐 소극적이 되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사법입원제다. 법무부도 최근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강제입원 대상이 되는 환자가 있을 경우 보호자나 경찰, 의사 등이 요청하면 법원이 판단해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제도다. 책임 주체가 명백하고 보호자에게 부담이 적으므로 일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정 과정도 좀 더 신속해질 수 있다.

보호자가 고령이거나 정신질환이 있어 입원동의서 작성이 어렵거나 여러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경우, 이런 제도를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충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사법입원제가 시행되면 여러가지 문제도 생겨날 것이다.

국내에서 ‘사법입원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 온 곳은 다름 아닌 대법원이다. 판사 인력이 부족하

다는 이유다.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부당한 입원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사도 많이 필요하다.

결정은 판사가 하더라도 정신과 전문의, 그것도 매우 숙련된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사명감을 갖고 책임있게 이 일을 하도록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사법입원제

실제 강제력을 행사할 호송 인력의 문제도 있다. 상당한 수준의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그런데 다른 많은 범죄와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도 “범죄와 연결되는 가장 확연한 변수는 빈곤이다.”(<옥스퍼드 범죄학 핸드북>) 2021년 한국에서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 범죄자 50명 중 40명의 생활수준은 “하류”에 속했다. 32명은 미혼, 6명은 이혼 상태였다.

따라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복

지도 강화돼야 한다.

무엇보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해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극도로 조심스러워야 하는 일이다. 그나마 명백한 증상을 보이는 중증 조현병 환자의 경우 일부 가능하지만, 인격장애 환자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진단의 객관성 자체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절차가 충분한 지원 없이 요식행위가 된다면 사실상 국가가 범죄 “가능성”을 이유로 취약한 정신질환 환자들을 마구잡이로 구속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정부가 충족시키리라 기대할 수 없다.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더니 정작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은 동결한 정부다. 게다가 긴축 예산은 더 많은 빈곤을 낳을 것이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그중 일부의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을 줄이는 것을 윤석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망상일 것이다.

마르크스주의가 이 사회의 흉악한 일들을 분석할 수 있을까?

끔찍한 행위를 한 사람들은 흔히 그냥 '악마인 것처럼 묘사된다. 그러나 **사이먼 바스케터**는 설명이 일절 불가능한 인간 행동이 있다고 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영국에서 신생아 7명을 살해해 최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연쇄 살인 간호사 루시 랫비나 전쟁처럼 더 거대한 규모의 잔혹 행위를 벌이는 자들은 그저 악마인 걸까? 끔찍하고 흉악한 행위들은 흔히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행위들은 어쩌다 보니 어떤 악의 기운이 개인이나 온 세상에 씌워서 나온 것이라고들 한다. 이런 악귀가 여기저기 붙어 다니면서 연쇄 살인마가 생겨나고 전쟁으로 난리가 나고 대량 학살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끔찍한 일을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분석해야 할 중대한 이유들이 있다.

예컨대 홀로코스트가 '다시는 되풀이

돼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끔찍한 행위들을 그저 모호한 '악'의 결과로 치부하면 이체제가 그런 행위를 부추기고 정당화하는 현실을 가리게 된다. 체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명심해야 할 점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개인의 모든 행동을 완전히 설명하거나 거기에서 하나하나 의미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살인자가 왜 그 행위를 특정 방식으로 특정 시점에 했는지는 선정적인 다큐멘터리나 더 진지한 회고록, 피해자 연구에서 차고 넘치게 다룬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이렇게 썼다. "마르크스주의는 심지어 체스의 역사를 다룰 때에도 매우 훌륭하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로 체스 두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학수사대(CSI) 마르크스주의를 홍보하는 말은 분명 아니다.

마르크스주의로 한 사람이 특정 행

동을 하도록 만든 원인, 환경, 선택 사이의 정확한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그 행동의 맥락을 제시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인간은 자신의 역사를 만들지만 자기 마음대로 만들지는 못한다.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환경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미 주어지고 과거에서 물려받은 환경 속에서 역사를 만든다."

마르크스의 통찰은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그 환경을 변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개인들이 의지를 자신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관철시킬 수는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대량 살해

대량 살인범들에 대한 최초의 만만찮은 연구는 1980년대에 사회학자 엘리엇 레이턴에 의해 이뤄졌다. 레이턴은 이렇게 주장했다. "살인범들은 천재가 아니다. 오히려 사악하고 화가 난 멍청이들이다." 그러나 또한 레이턴은 사람들이 위협받는 계급적 입지를 지키려 하면서 대량 살인마가 생겨난다는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봉건 시대에는 대량 살해가 만연했는데, 이것은 영주와 왕이 농노 계급의 노동에 빌붙어 사는 극도로 불평등한 체제의 산물이었다.

반란의 시기에 영주들과 왕들은 살육으로 지배력을 각인시키려 했다. 이런 환경은 농노들을 먹잇감으로 삼은 대량 살인 귀족들을 만들어 냈다. 레이턴은 15세기 프랑스의 남작 질 드레의

사례를 든다.

그는 "적게는 141명, 많게는 800명의 농노 아이들을 살해했다. 그는 그가 속한 계급이 품은 광폭한 탄압 열망의 화신이었다."

산업 시대로 넘어와서 레이턴은 이렇게 주장한다. "새롭게 부상한 부르주아지의 필요에 복무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급에 속한 의사, 교사, 교수, 공무원 같은 중간계급 직능인들은 더 낮은 계급의 구성원들, 특히 매춘부나 하녀를 먹잇감으로 삼았다."

물론 이런 설명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지는 않는다. 게다가 이런 역사 서술에는 허점도 있다.

현대에는 불안정한 노동계급 사이에서도 살인자들이 생겨나고, 이들이 많은 경우에는 차별받는 집단이나 약자들을 죽인다는 것을 레이턴은 간과했다. 트로츠키가 지적했듯이 '누가 아동보다 약하겠는가?'

그러나 사람이 그저 '미쳐서', 또는 '사악해서', 혹은 둘 다여서 끔찍한 일을 벌인다는 미디어와 사법적 접근에 비하면, 레이턴의 접근법은 더 현명한 출발점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기는커녕, 자본주의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거나 무너진다. 자본주의 체제는 사람들을 아예 죽이기도 하고, 그러지 않는 경우에도 사람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전을 방해한다. 사람들의 지적 능력이 방치되고, 예술적 재능이 발견되지 않거나 진가를 인정받지 못한다.

창의적이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하는 인간 고유의 능력은 상품으로 전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wspaper.org/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f 노동자 연대

@wspaper

ws@wspaper.org

노동자 연대TV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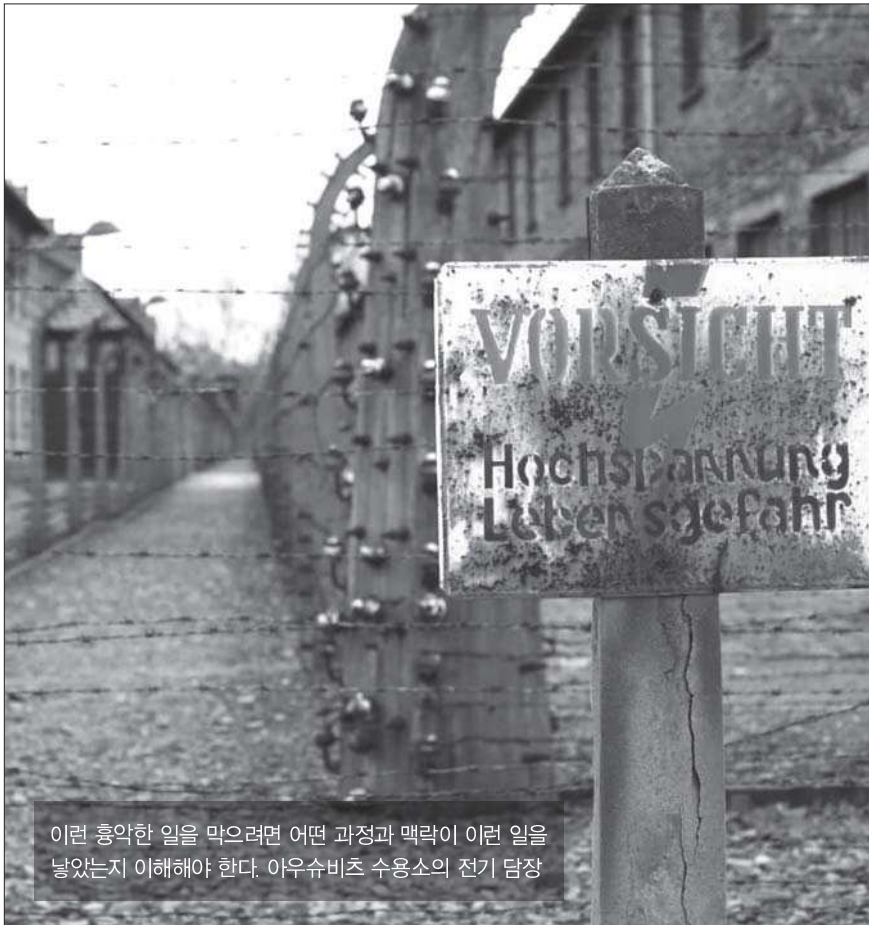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런 흉악한 일을 막으려면 어떤 과정과 맥락이 이런 일을 낳았는지 이해해야 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전기 담장

전망각

락하고, 그 값어치는 오로지 자본가들이 지불하려 하는 만큼으로 정해진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말처럼 “시대의 오물” 속에 빠져 있다. 인종차별, 성차별, 동성애 혐오, 경쟁심, 순응하는 태도, 수동성, 불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관념과 태도들은 자본가들이 대중을 분열시키고 약화시키며, 소수인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난 자’들의 결정과 쇼를 수동적으로 지켜보는 처지로 전락해 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삶을 변화시키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배운다.

우리는 사회, 더 나아가 역사가 위대한 개인들(주로 백인 남성이다)에 의해서만 들어진다는 사상을 쉴 새 없이 주입받는다. 그리고 ‘실패’는 개인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고, 더 나쁘게는 그냥 원래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배운다.

그러나 예컨대, 성폭력은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의 본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성폭력은 여성을 상품과 이등 시민으로 취급하며 성이 소외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환경과 선택

경제 위기와 차별, 빈곤, 실업은 어느 개인도 혼자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폭력과 착취에 기반한 사회에서 사는 경험은 여러 결과를 낳는다. 개인들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자신이 직면한 갈등과 좌절에 대처하는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

트로츠키가 썼듯이 “비슷한(당연히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 조건에서 겪는

비슷한 고통은 비슷한 반응을 낳는다. 고통이 강력할수록 개인의 특수성이 무의미해지는 시점도 앞당겨진다.

“간지럼을 태우면 사람들의 반응은 상이하다. 그러나 뜨겁게 달군 인두에는 비슷하게 반응한다. 증기 망치가 창이든 정육면체로 된 쇳덩이든 모두 얇은 철판으로 만들어 버리듯이, 너무나 강력하고 거스를 수 없는 사건들의 타격 속에서는 저항력이 무너지고 ‘개성’의 경계가 사라진다.”

사회 내의 분노와 착취, 소외는 사람들 사이에서 불화를 낳는다.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데, 모든 것이 긍정적인 건 아니다.

나쁜 일을 설명하려는 것은 그것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니다. 사회에는 온갖 종류의 분열이 있어서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하고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모든 군대는 판에 박은 듯이 움직이는 관료적 살인자들을 양성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갖은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은 그런 일이 인간 본성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악의 평범성’은 이 체제에 내재된 불변하는 특징이다. 그 대가로 전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희생되고 이후에는 흔히 군인들 자신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서로 비슷한 선택을 하는 몇몇 개인들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다지 놀랍지 않은 일이다. 그 체제를 존속시키려고 생겨난 기관들이 죽음과 파괴를 극대화하고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하도록 조직돼 있으니 말이다.

무엇을 악으로 볼 것이냐에 관한 지배 사상의 우선과 더불어, ‘선’이란 무

엇인가에 관한 일련의 규칙들도 있다. 도덕적 관념들은 사회의 산물이다. 도덕적 관념들은 사회가 계속 기능하려면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관한 믿음을 강력하게 표현한다.

우리가 모두를 명백히 이롭게 하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면, 무엇이 ‘선’이냐는 물음에 답하기는 쉬울 것이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선’이란 집단에 이로운 행동을 뜻할 것이다. 그러나 계급사회에서는 모순과 갈등 때문에 모순적인 ‘선’의 개념이 발전했다.

기존 사회를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계급은 사회가 계속 굴러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한 일련의 관념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관념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파하려는 가치를 사회 전체에 필요한 가치, 즉 그 자체로 옳은 절대적인 ‘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컨대, 기독교는 사람들이 “악하게” 태어났다고 가르친다.

이는 내세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교회의 힘과 현세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의 힘, 둘 다를 정당화했다.

‘선한’ 행동에 대한 관념은 무엇이 지배계급에 이로운지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런 도덕은 지배층 사람들은 제멋대로 해도 되지만 노동계급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강요된다.

도덕의 모순

반면,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계급, 그래서 사회를 다른 기초 위에 서도록 변화시키려 하는 계급은 도덕 관념에 대한 다른 해석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봉건주의를 대체하면서 도덕적 가치가 변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본주의가 된 현재, 우리가 도달한 단계의 생산양식은 대다수를 착취하는 데 의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지구를 위협하고 있다.

그 결과, 공동체가 기능하지 못하게 하는 질서를 존속시키는 바로 그 도덕이, 되풀이되는 대규모 야만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국지적인 수준에서 재생산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기준으로 봐도 ‘악’이다. 반면, 이 체제에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의 투쟁은 연대와 나눔 그리고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관념들을 낳는다.

이것이 이 끔찍한 세상에서 빠져나올 발판이고 최소한의 좋은(그리고 ‘선한’) 일이다.

출처 Simon Basketter, ‘Can Marxism analyse the worst events in society?’ (2023. 8. 28) / 번역 양효영

▶ 16면에서 이어짐

있어요. 일본에서 생후 24개월 미만으로 제한한 게 그나마 가장 완화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씨가 덜커덕 전면 수입으로 간 거죠. 그러니 그 조치에 반대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너무나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괴담 취급하는 건 현 정부의 다른 역사 왜곡처럼 ‘무조건 우기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방류가 시작된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소책자에도 썼는데요, 방류가 시작됐다고 해서 운동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예방적 조치로 현재 후쿠시마 현 인근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정부는 맨날 해류가 한국과 반대쪽으로 흐른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흐를 것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기후 위기 시대에 해류의 방향과 강도도 실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쿠로시오 난류가 약해지면서 따뜻한 대기가 정체해 도쿄가 더워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또 일본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점이 있어요.

한 예로 일본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을 주도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도 그에 가입하려 하는데요, 최근 영국이 여기 가입하면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 제한을 다 없앴습니다. 대만도 가입 조건으로 규제를 다 풀었죠. 한국은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정부 자신이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딱 밝혀놨는데 말이죠.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보다 훨씬 심각하고 큰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한국 총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될 것이고요. 오염수 투기 방류 자체도 문제지만 윤석열 정부가 나서서 식민 지배 시절 일본 정부의 만행에 눈감아주려 하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올해에만 네 번 더 방류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계속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정리 장호중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일본에서도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큼니다”

최근 반핵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 10답》 소책자를 발행했다. 대표 집필자인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올해 2월 일본 반핵 단체들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방류 직후에도 일본을 방문해 현지 여론을 듣고 왔다.

기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인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일본 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얼마전 일본 〈아사히〉신문이 한 여론조사에서 40퍼센트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40퍼센트나 나온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같은 여론조사에서 오염수 방류에 불안하다는 의견은 75퍼센트나 됐어요.

기시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과 “신뢰가 깊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후쿠시마 어민 단체 대표는 “근거가 뭐냐” 하고 직격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일본 정치 환경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일본 홋카이도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홋카이도 신문〉이라는 지역 언론을 보니 1면 머릿기사 가 “오염수 방류로 중국이 전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홋카이도 수산물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수출, 홋카이도 수산물 산업에 심대한 타격, 재고 늘어”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만큼 불안과 반대 여론이



8월 24일 총리 관저 앞 항의 행동 “기시다 타도!”

크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측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대형 탱크를 만들어서 오염수를 계속 보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견고탱크’ 기술도 많이 발달했다고 해요.

부지가 없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합니다. 후쿠시마현에 버려져서 쓰지 못하는 땅이 얼마나 많은데요. 사고가 난 1~4호기 바로 옆에도 핵발전소를 더 지으려고 했던 부지가 있다고 해요.

사회운동이 약하다 보니 여론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을 뿐 일본에서도 실제로는 불만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난 2011년 이후 일본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고 봐요.

윤석열 정부는 핵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방사성 물질이 배출된 2011년 사고 이후에도 한반도 근해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안심해도 된다고 합니다.

소책자에 실은 것처럼 백도명 교수님이 당시 한반도 근해의 세슘 농도를 재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일본과 인접한 한국 동해와 남해에서 2011년 이후 세슘 농도가 높아졌다가 천천히 떨어지는 게 관측됐다는 거예요.

소책자에는 심지어 못했지만 사고 이후 한국에 내린 비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기도 했어요.

당시 상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게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병원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머리를 감싸 안아서 학교에 데려보내고 집에 갈 때도 차에 태워가느라 앞길에 미어 터졌던 게 기억나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했었죠.

그 당시에 제주도와 부산 대구 등지에 내린 비에서는 우리나라 음용수 기준을 충족했지만 미국 기준으로는 먹을 수 없는 물로 판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세슘이나 아이오딘(요오드) 등이 많이 검출됐어요.

2011년 사고 이후 한국 근해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여당이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고 비난한 것도 비판하셨던데요.

[자민통 활동가였다가 우파로 전향한] 민경우 씨가 국민의힘 토론회에 가서 자기가 무슨 내부 논의를 잘 아는 것처럼 말했던데요. 그 분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 당시에는 가끔 회의 끝날 무렵 술이나 한잔 하러 왔지, 회의에 참석한 적이 거의 없어요.

이명박 정부의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운동이 벌어진 게 2008년인데요. 미국에서는 2003년에서 2006년까지 광우병에 걸린 소가 3마리 확인됐어요. 2008년은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던 때예요.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미국에서는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사료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광우병 의심 소, 주저앉은 증상을 보이는 소의 도축을 금지하는 법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전 세계적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나라가 없

▶ 15면으로 이어짐

노동자연대 TV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매주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온라인 토론회

옥스퍼드 대학교 존 패링턴 교수 초청 강연

시가 세계를 지배하게 될까?

9월 4일(월) 오후 8시 발제 존 패링턴

옥스퍼드 대학교 세포/분자악리학 부교수, 인간의 뇌와 의식 연구,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당원

※ 전문 통역사의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노동자연대 TV X 도서출판 책갈피

온라인 토론회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출간 기념 저자 초청 토론회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저자 정호중

9월 13일(수) 오후 8시

유튜브 실시간 방송